

공정위 보도자료 일람

(2008. 3. 24. ~ 5. 14.)

일 자	자료명	담당부서
3. 24.	온라인 쇼핑물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 - 도입이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(에스크로이체서비스)도 보급	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
3. 26.	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젠 공정위가 담당합니다. -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이관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3. 27.	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습니다. - 튼튼한 기업, 활기찬 시장, 행복한 소비자	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
3. 28.	"무역업체 올리는 외국환수수료 신설 답합" - 8개 은행,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및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답합	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
3. 31.	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7주년 및 「제7회 공정거래의 날」 기념행사 개최	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
4. 1.	스키 시즌권 해지, 올해부터 제대로 환불받으세요. - 공정위, 위약금 외 수수료 추가징수조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4. 3.	2008년도 출자총액·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	시장분석정책관 기업집단과
4. 4.	"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지로수수료 인상 답합" - 지로수수료 인상 답합행위를 적발하여 총 43억5천3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	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
4. 7.	에프엔씨코오롱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	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
4. 8.	대주건설·남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-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를 적발,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	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
4. 10.	공정위 영문 Annual Report 발간	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
	불합리한 대리점 이전기준 조항은 무효 - 공정위, 대리점계약상 거점이전제한, 계약해지사유 등에 대해 시정조치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4. 14.	"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"개정(안) 입법예고 -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,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등	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
4. 15.	"인터넷쇼핑물 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으로 공개" - 전국 시군구에 신고 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	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
4. 18.	5개 영화배급사, 3개 복합상영관 영화 관람료 답합 적발 - 요금 할인증지 답합행위 등에 과징금 총 69억 원 부과	시장감시국 기간산업경쟁과

	자료명	담당부서
4. 21.	"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"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	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
4. 22.	2007년도 공정위 사건처리 결과	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
4. 23.	공정위,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「법령선진화추진단」 구성	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
4. 24.	"도시가스 공급약관 개선" - 전국 1,200만 도시가스 사용자의 생활안정과 편익증진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·	2008년 1/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공개	소비자본부 특수거래과
4. 25.	4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-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적용하여 부당감액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	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
4. 29.	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"계약 24시간 이후 계약금반환금지 조항은 무효"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·	의료기기 판매업체(타이코코리아)의 수입 대리점에 대한 공급중단행위 제재	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
4. 30.	"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" - 불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예방하는 계기 마련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
5. 1.	2007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- 중견 그룹들의 M&A 및 금융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활발	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
5. 6.	"지하철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제재" - 들러리 함부로 서다가 큰 코 다쳐, 들러리 건설사들에 과징금 51억8백만 원 부과	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
5. 7.	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	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
5. 8.	인터넷 포탈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	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
5. 9.	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- 제조·용역 및 건설업종 10만개 업체 대상	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
5. 13.	광역 시·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·규칙 개선키로 "풀뿌리 단계에서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기대"	경쟁제한규제 개혁직업단
5. 14.	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계획 "온라인게임, 내비게이션 등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기준 신설"	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